



목차 & 두 줄 요약



빅데이터 29



해외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애플, 구글·메타에 과징금 부과 29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해 각각 59억 원과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구글과 메타도 개인정보 침해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정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30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57종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며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무청,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 31
병무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병역면탈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 착수 시간을 30% 단축하였으며 향후 병역면탈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해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

-196°C에 100만명 혈액·세포 저장...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첫발 32
정부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대규모 검체 저장시설을 구축하며 2032년까지 100만 명의 인체자원을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연구를 지원할 계획



기업

운행 데이터로 자율주행 고도화... 신차·중고차·렌터카 라인업 수직계열화 효과도 ... 33
현대차가 아마존카 인수를 검토하며 빅데이터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렌터카 사업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적인 운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한컴, 삼성SDS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수주 34
한컴과 삼성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해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제공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경쟁력 없는 헬스케어앱, 만보기 전략 위기 35
정부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이 지연되며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앱 발전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보험사 간 데이터 격차와 경쟁력 차이가 심화될 전망임



개인정보

개인정보 새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0점 패널티' 도입 36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잦은 개인정보 유출과 낮은 처벌 수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항목에 0점을 부여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부동산, 에듀테크 등 민생 밀접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자에 대한 조사 완화로 개인정보 보호와 신서비스 혁신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



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애플, 구글·메타에 과징금 부과

-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 원, 애플에 24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애플은 신용 평가 점수(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
 - *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액, 최근 일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총 542억 건
 - 이 때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자의 정보와 심지어 애플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전송하였으며, 애플은 알리페이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로 지정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
 -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외 이전 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애플에도 과징금을 부과함
- 또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며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옵션 더보기’ 버튼을 숨겨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를 어렵게 만들고,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약관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도록 설계해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도록 함
 -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방식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월 23일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각
- 위 사건들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의 중요성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개인정보위에 의하면 데이터 무단 제공에 대한 추가 처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할 예정
 - 또한 구글과 메타의 사례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로, 개인정보위는 추후 이와 같은 주요 국제소송에서 다각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할 것이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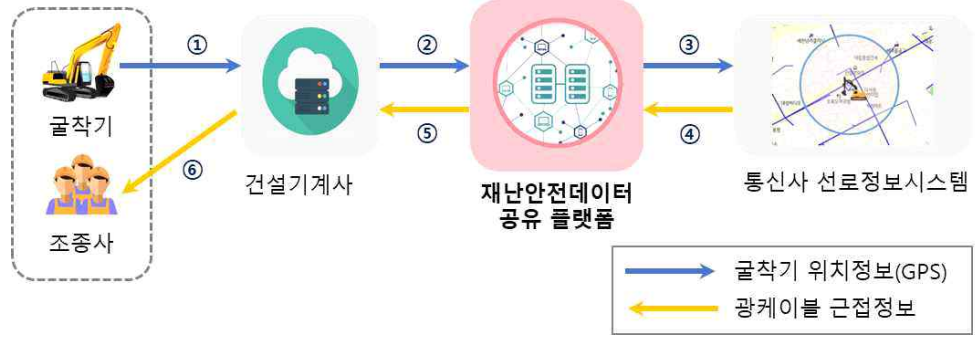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01.23.) 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서울신문(2025.01.23.) 4000만명 정보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애플...과징금83억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며 혁신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
 - 그간 기관마다 따로 제공하던 57종 재난 유형*의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검색 및 활용 기능을 강화
 - * 13종 자연재난(706개 데이터), 28종 사회재난(844개 데이터), 16종 주요상황대응(257개 데이터)
 - 이를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기 어려웠던 민간기업도 실시간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
- 행정안전부는 올해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통신케이블 매설정보’ 간의 중계를 시작으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발굴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 사전협의 없는 굴착공사로 인해 통신케이블 단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광케이블 매설위치와 비교해 운전자에게 근접 정보를 알려주어 통신케이블 단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 데이터 활용 개요>



- (통신케이블 매설정보) 최근 잦아지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서 조기경보시스템과 출입차단시스템 IoT 센싱정보를 제공하면, 내비게이션사에서 해당 지점 진입 시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음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 데이터 활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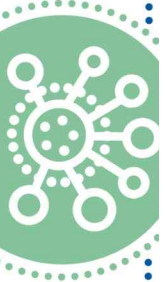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25.01.22.)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빅 데이터



병무청,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

- 병무청은 점점 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병역면탈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2023년 12월 병역면탈자 및 브로커 130명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병무청은 170만 명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빅데이터 기반 수사 방식을 도입함
- 병무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역면탈 의심군 분류 모델 개발로 면탈 의심군 목록 추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사 착안 사항이 체계적으로 도출돼 수사 착수 시간이 기존 대비 30% 단축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힘
 -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면탈자 특성에 속하는 의심군을 추출하고 병역판정검사와 면탈자 간의 패턴을 도출해 중점관리질환 32종* 중 특정 질환의 증가 추이를 파악
 - * 병무청은 병역면탈에 악용되는 질환을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1조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지정해 관리
 - 예를 들어, 병역면탈자 중 범죄이력이 있는 자들은 신경정신과 진단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조현병·우울장애 등 12개 질환의 진단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병무청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병역면탈 의심군을 찾아내는 분석 과정은 기존 제보 중심의 수사와 큰 차별점을 보인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된 의심군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추후 병무청은 분석 모델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
 - 병무청 측은 “지난해 구축된 ‘공정병역지킴이e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번 분석 모델을 적용해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데이터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빅 데이터



출처 : 헤럴드경제(2025.02.14.) 병무청,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 병역면탈 범죄 대응



-196°C에 100만명 혈액·세포 저장...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첫발

-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의 인체자원을 수집·보존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연구를 지원할 계획
 - 2025년 2월 현재 117명의 인체자원이 -196°C의 액체질소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해당 인체 자원은 유전체,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포함
 - 수집된 데이터는 바이오뱅크 및 데이터뱅크 시스템에 저장되며 연구자들에게 제공돼 신약 개발 및 질병 예측 연구 등에 활용되고 일부 희귀·중증질환 기증자들에게는 분석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 예측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27년까지 2천만 개의 검체 저장이 가능한 자동화 저장시설을 구축하여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확보에 대비하고 있음
 - 일선 병원 등 참여기관에서 환자·건강검진 수검자 등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혈액 등을 채취하면 제작업체가 36시간 내 이를 규격 용기에 담긴 자원 형태로 만들고, 사업단의 바이오·데이터 뱅크가 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생성
 - 2020~2022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2만5천 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정부는 본 사업에서 2028년까지 국비 6,040억 원을 투입해 희귀·중증질환자를 포함한 77만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저장실>



- 국립보건연구원 측은 “유전체 등을 분석해 질병·개인 특성별 맞춤형 치료는 물론 발생 가능성이 큰 질병까지 예측할 수 있는 ‘정밀의료’가 사업의 핵심”이라며 “연구 자원 축적과 활용이 국가 연구개발의 저력이 되는 만큼 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출처 : 연합뉴스(2025.02.12.) -196°C에 100만명 혈액·세포 저장...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첫발



운행 데이터로 자율주행 고도화... 신차·중고차·렌터카 라인업 수직계열화 효과도

- 현대차는 아마존카 인수를 검토하며 렌터카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렌터카 사업은 단순 차량 대여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차량 공유 및 카셰어링을 통해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테슬라와 중국의 BYD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렌터카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할 계획
 - 특히, 현대차는 2017년부터 렌터카 사업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량 운행 데이터와 운전자 패턴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
-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판매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사업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부각됨
 -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중고차, 정비, 판매 분야에서 수직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렌터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렌터카 업체 점유율 현황과 현대차·기아 국내 판매량 추이>



- 렌터카 사업 진출은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자율주행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향후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빅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
 -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카셰어링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렌터카 시장 진출은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

출처 : 서울경제(2025.02.09.) 운행 데이터로 자율주행 고도화... 신차·중고차·렌터카 라인업 수직계열화 효과도



한컴, 삼성SDS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수주

- 한컴과 삼성SDS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AI 기반 입법 분석 및 의정 활동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국회와 외부 협약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분석과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컴과 삼성SDS는 1단계 사업자로 선정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회 의정자료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약 13개월 동안 11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
- 한컴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외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 한컴은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AI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대규모 의정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도입하여 입법부 특화 문서 작성과 자동 법률안 초안 생성 기능을 포함한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
 -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한컴어시스턴트’ 솔루션도 적용될 예정임
-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을 확산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정책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AI 기반 입법 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효율화되고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
 -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AI 기술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앞으로 공공 AI 시장에서 수익화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
 - 이어 “현재 공공 시장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수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AI 사업 수익화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강조

출처 : 인공지능신문(2025.02.12.) 한컴, 삼성SDS와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수주...입법부 정책 결정 지원 강화



경쟁력 없는 헬스케어앱, 만보기 전략 위기

-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통신, 자율 분야를 우선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지연될 전망으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앱이 단순한 만보기 수준으로 전략할 우려가 커짐
 - 의료분야에서는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예방,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의료지원, 약물 비서 서비스 등 3개 과제가 올해 추진될 예정이었으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개방 확대를 명시
 - 이에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사업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논의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 개방이 지연될 전망
- 지난해 8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하여,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
 - 공동행동은 “개인의 질병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무분별하게 활용할 것을 우려
 -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3,997만명 정보를 이미 개별 보험사가 축적한 상황으로 건강보험 정보까지 추가 되면 민간보험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된다”고 말함
- 일본과 영국은 의료데이터를 익명 가공해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은 2009년 데이터 거래소 디지미(digi.me)를 출범, 이를 통해 영국 NHS(국가보건서비스)를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등의 300개 이상의 병원 진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일본은 2018년 6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의료데이터도 익명가공정보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익명정보 형태로 의료데이터 거래가 가능
- 보험업계는 고령화로 인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데, 건강보험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지자 자체 헬스케어앱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사 간 데이터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업계에서는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보험사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이미 2014년부터 빅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회사도 많다고 평가
 -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질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앱이 만보기 앱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출처 : 내일신문(2025.02.11.) 경쟁력 없는 헬스케어앱, 만보기 전략 위기



개인정보 새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0점 패널티' 도입

- 기획재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항목에서 0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 평가 기준을 강화
 - 기존에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평가 결과에 따라 0.5점의 계량 점수를 부여했으나 새로운 편람에서는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무조건 0점 처리가 되도록 변경됨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평가지표	세부평가 내용	
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량 0.5점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개보위)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 결과 반영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신설된 조항
*자료: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1건이 보고되고 2024년에는 7개월간 67건이 발생하며 한 달 평균 10건 이상 유출

<최근 공공기관 주요 보안사고 사례>

	일시	주요 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1월	해킹 공격으로 회원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6~7월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 해킹으로 약 23만60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장학재단	2023년 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크리덴셜 스텀핑' 해킹 공격으로 약 3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수위는 낮은 수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과징금은 2,342만 원으로 민간기업 평균(17억6,321만 원)의 1.3%에 불과
- 기재부가 공공기관 정보보안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경영평가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서 0점을 받으면 기관 등급이 하락하며 임직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영평가 등급이 기관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주는 사례로 2023년 고용정보원장 해임 사례가 있으며, 고용정보원이 해킹 사고로 인해 '아주미흡(E)' 등급을 받으며 기관장이 교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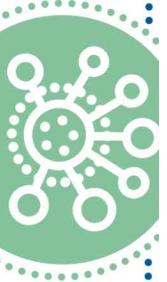
출처 : 머니투데이(2025.02.06.) 개인정보 새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 '0점 패널티' 도입

빅 데이터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월 22일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함
-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민생 밀접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을 실시
 - ① 코로나19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
 - ② 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 ③ 대규모 주택 분양·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이 큰 ‘부동산·건설’
 - ④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로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집적 가능성이 높은 ‘에듀테크’ 등이 있음
- 침해 정도가 약한 영세·소상공인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감경을 추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도 시범 제공하여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보조
 - 사소한 실수, 단순 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조사를 면제하거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위는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 다만, 제도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 발견 시 조사를 재개하고 재발 시 과징금 가중 등 보완 장치 마련도 병행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민관 협업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 본격 대중화가 예상되는 인공지능 비서 등 AI 응용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점검하는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조기에 확보
 - 아울러 인공지능의 접목이 활발한 HR(인사·노동) 분야와 리걸테크 대표적 솔루션도 점검할 계획
- 개인정보 관련 조사 및 법 집행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화
 -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해 보호법 규율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사점검 결과가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정책 협업을 추진
 - 내부 역량 확충과 조사·처분의 적법절차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사·처분의 투명성·신속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사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의결서 공개 범위 확대, 의견진술 기회 확대도 추진



빅 데이터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01.23.)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